

중동 위기 여파... 소상공인 긴급 보증 지원

전북자치도·전북신용보증재단, 200억원 규모 중동 위기 대응 특례보증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중동 지역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동 위기 대응 특례보증'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고 본격적인 피해기업 지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중동 경제 악화로 수출입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전북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총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위기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이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을 비롯해 운수업, 건설장비 운영업, 석유화학 제조업 등 고유가 영향을 받는 업종, 여행·

숙박·음식점업 등 소비 위축 피해 업종이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8%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최대 8년으로, 1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 없이 8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1년간 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하면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약 3%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

금 부담 완화 효과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중동 위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기자

전북기업 중국 진출 길 열렸다

전북테크노파크, 현지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테크노파크가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 손잡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 전략산업 기업의 중국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약, 인공지능(AI), 신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인 사업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진출 거점 구축, 투자유치 및 금융 연계, 인허가 지원, 합작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보호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산업 거점에서 전북 기업의 시장 진입과 정착을 돕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수출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에 발맞춰 중국 내 정책·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과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은 중국 산업정책 전문과 투자유치, 산업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기업들은 단순 수출을 넘어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동방싱크탱크 정보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지 투자와 기술협력,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진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 기업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향후 중국 진출 프로그램 운영과 글로벌 투자유치(IR) 지원, 한·중 공동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김용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취임

"공익 최우선·소통 조직문화로 국가 성장동력 만들 것"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제2대 원장으로 김용만 신임 원장(사진)이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용만 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전북 소재 진흥원 기술교육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6년 4월 20일부터 2029년 4월 19일까지 3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김 원장은 취임 첫날부터 전북 지역 탄소복합체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중심의 행보를 나섰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탄소융복합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도약에 힘쓰겠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지역 탄소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해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전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정읍시 부시장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공공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저서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를 통해 공공조직의 역할과 미래 공공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흥원 안팎에서는 김 원장이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탄소산업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기자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 소방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진흥청·소방청, 농업 현장 안전망 강화 '맞손'

농촌진흥청과 소방청이 농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지난 20일 세종정부청사 소방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 연계 및 첨단기술 활용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사고 감지 정보와 119 상황실 연계를 통한 신속 대응, 구조출동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소방공무원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 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 장비 개발과 실용화 등이

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농기계 사고 알람 시스템과 119 정보 연계, 구조출동 데이터 분석,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소방청의 구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농작업 사고 다발 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말발굽 피치 드론을 소방 현장에 활용하거나, 재난 대응과 농작업에 동시에 적용 가능한 무인 로봇 기술 도입도 검토된다.

/오상근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 보급 확대·홍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행료 감면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전북본부는 지난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애인과 가족 등 약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감면제도 안내와 함께 감면단말기 즉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단말기를 발급받는 등 실질적인 해

택을 체험했다.

특히 전북본부는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사업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된 휴대전화 간편신청 서비스도 집중 홍보했다. 기존에는 틀게이트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238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도내 주소지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443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여의도 집결 농민 2만명... "농협 자율성 훼손 중단" 촉구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 저해 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외부 감사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중단 등 5개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다.

특히 현장의 반발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치로도 확인됐다. 조합장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 권한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개편안에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박경식 공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농협 자율성 상실은 곧 농업 위기로 이어진다"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며 현장 중심 개혁을 촉구했다.

/오상근기자